

산업안전지도사의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과 관련한 의견서

고용노동부 의견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타법령을 무시하고 해당관계자들을 모독하는 국토교통부의 독선이 만든 행정예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요구하는 여러 자격요건에는 건설안전기술사를 산업안전지도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하는 조항들이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55조의2, 시행령 별표3, 별표11, 별표1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조, 제90조 등입니다.

이런 법령들은 국토교통부가 무시해도 되는 조항인지요?

제가 국토부 담당자와 통화하며 "무슨 근거와 기준으로 이런 말도 안되는 행정예고가 나왔느냐? 지금까지 우리 지도사들도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의 여러 관계자와 대화하면서 기술사와 동급이라는 점을 이해 받고 반영하겠다는 언질들을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왈 "누구와 통화한지는 모르나 그 사람들은 담당자가 아니다. 자신이 담당자"라고 하더군요. 다른 사람과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체계에 대한 기술등급 인정은 여러 의견을 참작하여 국토부 기준으로 담당자들만이 해석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자가 해당분야 관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행정예고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산업안전지도보건사협회"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제출받았느냐는 질문에 담당자는 지도사협회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의 의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업역이 겹치고 이익이 상반될 수 있는 단체의 의견만 제출받는 것이 어찌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고용노동부의 의견과 현황도 받았다고는 했으나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행정예고가 나왔으니 고용노동부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고용노동부 담당자와 지금까지 대화해온 것은 기술사와 동등한 자

격을 인정받도록 국토부와 협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 담당자는 기술등급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자신들의 몫이고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 산업안전지도사를 기사와 동등하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관계 해당자들의 단체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자신들과 친밀한 단체의 의견과 자신들만의 기준과 해석으로 산업안전지도사를

기사와 동등하게 취급하겠다는 행정예고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행정예고단계이니 의견서를 제출하라 하니 의견서는 제출합니다.

그러나 이미 행정예고에서부터 국토교통부의 의도가 아주 편향되어 있다는 것이 느껴져 걱정입니다.

기사와 동등하다는 행정예고만으로도 국토교통부가 얼마나 타부처를 무시하고 산업안전지도사들의 능력을 평가절하하고 뭉개려 하는지 느껴집니다.

산업안전지도사가 기사와 같다면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를 활용하면 되지 무엇때문에 산업안전지도사라는 자격을 만듭니까?

기술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등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면서 산업안전지도사들 취득하려고 몇년씩 공부한 사람들의 노력과 시간을 이렇게 평가절하해도 되는 것이지요?

기사와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산업안전지도사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정은 차라리 하지 않으니만 못합니다.

고용노동부를 무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무시하며 해당 자격자들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상반된 단체의 의견만 반영하여 행정예고 내리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독선이 아니면 무엇입니까?